

Hansun Brief

발행일: 2021년 12월 23일(통권203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기획시리즈5 - 기본소득,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차제에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실용성을 연속시리즈로 점검한다.

국내외 음의 소득세 정책의 주요 내용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안심소득제도
2. 미국에서의 음의 소득세 제도 논의
3. 근로장려금제도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음의 소득세 제도는 기존 조세 제도에 사회 복지적 요소를 추가한 것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 이하의 계층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프리드만이 제안해 미국 등에서 시도되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음의 소득세 제도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또 다른 기본소득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먼저 한국에서 도입되어 서울시에서 실험하고자 하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검토하고, 다른 나라에서의 시행 또는 실험 현황을 알아보자.

1. 안심소득제도

안심소득제도는 음의 소득세 제도로써 국내에서 제안된 제도이다. 박기성·변양규(2017) 등이 제안한 것으로 최근에 서울시에서 실험을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안심소득제는 기존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을 지원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7대 급여 중에서 3대 급여(생계, 주거, 자활급여) 및 국세청의 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대신 안심소득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¹⁾

1) 7대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출산급여, 장애급여이다.

박기성·변양규(2017)는 프리드만의 음의 소득 제도를 수정한 Tobin(1965) 및 Tobin et al.(1967)의 제안 내용을 안심 소득제도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Tobin(1965)은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은 구조적 전략과 분배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서 논문을 시작한다. 구조적 전략은 하위 20% 빈곤층에게 적절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분배적 전략은 소득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서 일정 수준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는 이 두 전략은 상호 경쟁적이지 아닌 보완적인 관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당시까지의 빈곤 대책은 구조적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며, 분배적 전략이 추가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빈곤 퇴치 정책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음의 소득세 제도를 주장하였다.

이들의 이론을 한국적 현실에 조정하여 제안한 박기성·변양규(2017)의 안심소득 제도를 정리해 본다. 이들은 4인 가구 기준 연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5,000만 원 미만까지 현금 소득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소득 계층에게는 현행 소득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안심소득 제도의 기본이라고 제안한다.²⁾ 이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w 를 임금, t 를 근로시간, 그리고 안심 세율을 40%라고 하면, 안심소득(Y_s)은 다음 식 (2)가 된다.

$$Y_s = 0.4 \times (5,000 \text{만 원} - wt) \quad (2)$$

이를 이용하면 처분가능소득(Y_D)은 식(3)과 같다.

$$\begin{aligned} Y_D & \\ &= wt + Y_s \\ &= wt + [0.4 \times (5,000 \text{만 원} - wt)] \\ &= 2,000 \text{만 원} + 0.6wt \end{aligned} \quad (3)$$

식 (3)을 보면 절편(소득이 0인 경우)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은 소득이 0인 경우 최소한의

2) 2016년 당시 4인가구의 월 중위소득이 4,391,434원이었다(박기성·변양규, 2017).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2,697,208원이 된다.

보장금액이다. 즉, 국가는 1인당 연 500만 원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이후 임금소득(wt)의 증가에 따른 기율기 0.6만큼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하는 구조이다.

이 제도는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인 4인가구를 보면 정부에서 무조건 2천만 원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 그 이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이 소득에 40%를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60%만큼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노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면 보장소득(2,000만 원)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구조를 기본소득정책 차원에서 해석하면 모든 4인 가구에 2,0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추가되는 소득에 대해 60%를 보장해주는 정책이다.³⁾

박기성·변양규(2017)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노동공급 증가로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효과는 기본소득제도가 주는 노동의욕감소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소득중대를 유인한다는 장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음의 소득세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다.⁴⁾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에

3) 물론 2,000만 원 보장소득 수준은 매년 변화해야 한다. 연도에 따라 중위소득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득이 0인 계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받는 금액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보장 금액이 안심소득제도가 제안하는 3대 급여(생계, 주거, 자활급여) 및 자녀장려금 폐지에 따른 소득 손실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 월 중위소득은 4,876,290원(연 58,515,480원)이다(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2020).

4) 대선과정에서 유승민은 일종의 음의 소득세 제도인 공정소득을 제안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세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본복지·행정절차 보완 및 의미 있는 일정 소득 보장으로 시민 삶의 상향평준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서울시 새소식, 2021).

2. 미국에서의 음의 소득세 제도 논의

음의 소득세 제도가 미국에서 시행된 것은 1969년 8월 8일 닉슨 대통령이 제안한 가족 지원계획(Family Assistance Plan)이다(New York Times, 1973). 이는 자식이 있는 가족에 대하여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지원금을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음의 소득세 제도를 채택한 것이었다.

이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68-1982년 시기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5번에 걸친 실험을 수행하였다(Linke, 2018). 실험의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실험 계획이 매우 복잡하고 소득 보고에 잘못된 것이 발견된 것도 그 이유였다. 그럼에도 발견된 주요 결과를 보면 음의 소득세 수혜자의 일부에서 약간의 노동 감소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감소는 크지 않았다. 1년에 2-4주 정도였고, 어떤 계층은 교육을 받기 위한 원인이기도 하였다. 추가로 음의 소득세 수혜자 계층에서 이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닉슨 대통령이 음의 소득세 제도를 천명했지만 시행에 실패한 이후, 포드 행정부는 다른 형태의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제안하였다. 그 이후 레이건 행정부에서 음의 소득세 제도와 유사하게 변화되었고, 오늘날 미국 이전 소득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Linke, 2018).

3.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제도는 대표적인 음의 소득세 제도로 저소득층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키면서 근로의욕을 향상시켜 경제성장도 추구한다는 목적에서 설계된 일종의 조세제도이면서 사회보장제도이다.

미국에서 근로장려세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5년 카터 행정부였다(박능후, 2005). 이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면세점을 설정하여 저소득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던 사회보장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0-4,000달러의 근로소득에 대해 당시 사회보장세율과 유사한 수준인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었다. 당시에는 점증구간(0-4,000달러)과 점감구간(4,000-8,000달러)만 존재하였으나, 1978년 법개정으로 고정구간(plateau)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나, 각 구간의 임계치 및 급여율(점증구간의 급여 증가율 및 점감구간의 급여 감소율)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⁵⁾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2006년에 도입하여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부터는 지급대상자가 자영업자로 확대되었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문자회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

5) 1991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유리하도록 설계가 변경되어 급여 구간의 임계치 및 급여율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1994년 부터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시작하였지만 다자녀 가구에 비해서는 불리하게 설계되었다(박능후, 2005).